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전망

김영희 / 중앙일보 부사장, 대기자

다시 뭉치는 북방 3국

토끼 모양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방의 북한 · 중국 · 러시아의 3각 협력체제와 남방의 한국 · 미국 · 일본의 3각 협력체제를 마주 세워놓고 보면, 남북의 명암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먼저 북쪽을 보자. 작년 여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1989 ~ 90년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약화와 후퇴의 길을 걸어온 북한 · 러시아 관계의 복원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중단의 조건을 듣고 그것을 오키나와 선진 8 개국(G8) 정상회의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일정한 역할과 이해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거의 한 달에 걸친 열차 여행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한과 러시아는 마침내 우호 협력 관계를 198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냉전 시대 두 나라 관계가 이념적인 동맹이었다면, 21세기의 북러 관계는 경제적인 실리 위주의 파트너 관계로 부활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례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9월초 평양을 방문했다. 그는 두 번에 걸친 중국 방문을 통해 1970년대 말 이후 중국이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경제의 시장화, 다시 말하면 이른바 ‘ 사회주의 시장경제 ’를 현장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상하이(上海)의 푸동에서 받은 충격은 ‘ 천지개벽 ’이라는 그의 감탄으로 널리 알려졌다. 김정일 · 장쩌민 양 정상간의 평양회담으로 북중 관계도 1990년대 중반 김 위원장이 중국의 시장경제 이행을 비판한 이래 냉각되었던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특히 주목된 것은 김 위원장이 장 주석의 ‘ 3개 대표 이론 ’을 찬양했다는 보도다. 이 이론은 중국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 선진 문화 그리고 광대(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산당이 ‘ 광대한 ’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자본가가 공산당에 입당해야 한다. 그들의 입당이 공산당의 체질을

경쟁적인 자유 시장 형태로 변질시킬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고도 논리적인 기대다.

김 위원장이 3개 대표 이론을 지지했다면, 그것은 북한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장 주석도 북한의‘ 동무들 에게 정당도 사회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이 중국식 개혁과 3개 대표 이론을 어느 정도나 수용할 것인지가 북한의 장래뿐 아니라 남북 관계와 북한의 대외 관계 전반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 러시아 관계와 북한 · 중국 관계라는 두 변의 강화는 중국 · 러시아 관계의 다른 한 변의 복원과 후속으로 실현된 것이어서 장쩌민 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북방의 3각 협력 관계는 일단 모양을 갖춘 꼴이다.

갈등하는 한미일

남쪽의 한미일 3각 관계는 북쪽의 3각 관계와는 대조적이다. 대북 포용 정책을 쓰던 클린턴 정부가 부시 정부로 교체됨으로써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공조 ·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미국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견제하는 입장으로 사정이 크게 후퇴했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불신하고, 아직도 북한은 협상과 지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타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를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북한이 불량 국가로 남아 있어 주는 것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명문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한일 관계는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최악의 상태에 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의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여권 3당 간사장들과의 면담 약속을 취소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회담 제의까지 거절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대일 감정이 악화되어 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민간 교류가 올-스톱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북방 3각 관계의 강화와는 대조적으로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는 현상 유지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의 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게 불행한 현실이다.

작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평화체제로 대체되고 남북은 평화 공존의 시대를 맞게 되는 획기적인 계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작년 10월 김정일 총비서는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북한이 미국과 미사일 협상을 하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양보를 할 용의가 있음을 암시했다. 조명록의 방미는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북한 방문으로 이어져 남북 관계와 함께 북미 관계에도 서광이 비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출범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이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강경 노선으로 바뀐 것

은 물론이고,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까지 제동을 걸고 나왔다.

작년 3월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의 김 대통령은 봄이 아니면 늦어도 상반기 중에 실현될 것으로 낙관했었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는 최소한 남북 ‘ 평화 선언, ’ 잘되면 ‘ 평화 협정 ’에 조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 그런 꿈은 거품처럼 사라졌다.

관망하는 김정일 위원장

워싱턴의 한미정상회담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준 메시지는 가혹하고 냉엄한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이 김 대통령의 면전에서 북한은 ‘ 믿을 수 없는 나라 ’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한국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 부시 정부가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를 계속해도 북한이 남한에서 크게 얻어낼 것이 없다는 판단은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6.15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남북한 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흥미를 잃게 만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한 사회에서 김 대통령은 DJP 공조의 붕괴로 심각한 정치 위기를 맞아 대북 관계에서 김 위원장의‘ 협조 ’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견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김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가 극도로 약화되는 마당에 김 대통령의 북한 지원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만족스럽게 실천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힘을 비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상대로 비난과 물밑 대화의 시도를 병행하는 것이다. 남한에 대해서는 접촉 유보 태도로 남한의 정치 사정을 당분간 관망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애처롭게 매달리는 김 대통령의 모습은 북측의 시간 끌기 전술에 효과를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는 기회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 붕괴는 김 대통령이 자민련에 의원 꿔주기로 여소야대를 인위적으로 여대야소로 바꾼 부자연스러운 정국 구도를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여 남한의 평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 4강들도 김대중 정부를 상대로 한 진지한 협력에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김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안에 6.15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을 전부 이행하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자신이 못 다한 일은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